第282回國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9 號
(臨時會・閉會中)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6月10日(水)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審査된案件

1. 현안보고 ····· 4
   가. 외교통상부 소관

(14시50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사무처 전보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찬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6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산적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아직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도 최근에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문제나 또 최근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또 한미 외교장관회의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등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며칠 후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6월 9일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위원 등 13인의 위원들께서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회 요구의 내용은 6월 10일 오늘과 또 12일에 각각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현안 문제들에 관하여 정부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회 요구에 따른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다시 간사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마는 간사회의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에 의한 개회 요구에 따라 일단 의사일정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불참한 상태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회의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5분 이내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예,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우선 한나라당 위원님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회의 소집 시간이 2시입니다. 그런데 2시 50분이 지나서야 이렇게 회의가 개회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회의가 늦어지는지에 대한 이유 설시도 없었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반듯한 국회 없이는 반듯한 민주주의 결코 실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신조처럼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첫걸음이 시간 엄수입니다. 이렇게 50분씩 타 당의 위원을 발 묶어 놓는 것은 정말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의 날입니다. 대부분 비어 있는 민주당 위원들은 지금 서울광장에 나가서 비바람을 맞고 있고 한나라당은 편법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지금 상임위원회부터 열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온 국민이 군부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 몸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자유와 민주를 외쳤던 날이지 특정 세력, 특정 정파가 서울광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국회법 제5조에 보면 상반기에 매 1일은 국회를 반드시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개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아무리 해도 그 개회요구할 수 없지만 여기 계신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얼마든지 본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시고 밖으로 돌고 있는 제1야당을 끝까지 설득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무슨 빚 독촉하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 의원실에 팩스 한 장 달랑 넣어 놓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입니다. 더구나 과반수 의석을 넘는 여당입니다. 그러면 맏형다운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편법에 꼼수까지 부리느라 잔머리 굴려서 민심을 호도하려 들지 마시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여당다운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동료 위원들 충분히 대접을 좀 해 주십시오. 출입도 못 하게 상임위원회 회의실 막아 걸고 그리고 팩스 한 장 달랑 넣어서 빚 독촉하듯이 몇 시까지 오라고 해 놓고 한 시간씩 회의도 열지 않고, 이런 오만과 독선 이제 그만하십시오. 야당과 우리 자유선진당 같은 소수당 끝까지 설득해서 끌어내는 큰 형님 같은 모습 정말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외통위의 위엄과 권위는 위원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밖에서 외통위를 상원이라고 부른다지만 초선인 제가 겪은 외통위는 한마디로 아수라장 국회였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행위에 동참하지 마시고 동조하지 마시고 외통위의 명성을 지키는 길을 찾아서 반듯한 민주주의, 반듯한 국회 세워 나가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듣기 거북하셨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편법으로 열리는 이런 상임위원회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퇴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박선영 위원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법이나 꼼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폐회 중에도 상임위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정옥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박선영 위원이 지금 퇴장한 상황에서 왜 2시에 열려야 될 회의가 3시에 열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많은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야당 위원이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이 상임위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이 회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야당 위원들의 회의 거부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추가 핵 실험 가능성이라든지 또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외통위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NLL상에서 도발

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매우 중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가 매우 불가피하게 반드시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다수의 의견으로 지금 상임위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 아마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6일에, 현충일이었습니다. 주 카메룬 대사관의 유홍근 참사관이 순직했습니다. 총망 받는 외교관이었고 7개월 된 딸을 한번 안아 보고, 그리고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이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풍토병을 앓아가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외교관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고 순직한 유 참사관께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남북관계 좋지 않습니다. 산적한 안보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또 초여름에 내리쬐는 뙤약볕에서 우리 국토·영해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월에 NLL에 대한 무력 대결 태세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긴장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불철주야 방위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6·10항쟁의 뜻을 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역사의 고비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불려 나가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과 애국심을 마다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이분들의 뜻을 기리고 국가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내 정파적 이해 때문에 상임위 참여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야당 위원들의 행태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원래부터 6월 1일은 국회 개원이 예정되어 있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임위가 열린 만큼 야당 위원들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황진하 위원님!

○黃震夏 委員 조금 전에 박선영 위원님께서 자유선진당의 간사 입장에서 말씀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입장에서 말씀한 것인지 자기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나가버린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회법에도 보면 제52조에 임시국회 폐회 기간 중에도 상임위원회는 현안 이슈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폐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개최 안 한다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자유선진당 입장이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정옥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적해 있는 외교·통일·안보 관련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소집은 절대 못 하겠다,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임위 회의조차도 불편부당한 회의를 소집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물론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이나 누구든지 이러한 중요한 국가 현안이 있을 때에는, 또 상임위원회에 관한 현안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를 소집해서 그런 문제를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가 촉구할 것과 우리가 강조할 사항들을 다루어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점에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자유선진당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을 하고 본인 개인의 입장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께서는 지금 외교통상부장관이 와 계시니까 현안보고를 받고 계획된 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

니다. 일부 야당 위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대북 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진행 경과보고와 국정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개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분명한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국정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야당의 국회 복귀와 상임위 참석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미 알려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15시04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 경과와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그리고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결과 등 외교통상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입니다.

오늘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보고 안건은 북핵실험 관련 현안, 또 한미 정상회담 준비 현황, 그리고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결과 이상 3건으로 정리 종합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방금 전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님께서 며칠 전 불행히 순직한 저희 유 참사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해 준 데 대해서 저희 외교부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핵 실험 관련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6자회담 합의의 틀을 위반한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되,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 정부 고위 대표단과의 협의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국무성 스타인버그 부장관 등 미 정부 고위 대표단이 6월 2일부터 5일까지 방한하여 북핵 문제 관련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의 의도 및 내부 정세 평가, 그리고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한미 간의 기본 대응방향, 그리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안 등에 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5자 간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다는 데에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2박 3일간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양자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저와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하에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진정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 개시를 위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5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엔안보리 대북 추가 결의 논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안보리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를 즉각 개시하였습니다.

그간 P5, 즉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불란서에 추가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현재 결의 문안에 거의 합의한 상황이므로 금주 중 결의안 채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번 결의안에는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강한 내용의 제재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무기 수출·수입 금지, 북한발 또는 북한행 화물 검색, 금융·경제제재 조치 강화, 제재위원회의 활동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P5+2에 직접 참여하여 문안 협의 과정에 기여하였으며,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추가 결의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추가 결의 채택 후 국내 이행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등 5자 간에 협력을 강화토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이라는 5자 간의 공통 인식을 토대로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6월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금번 방미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주요 각료 접견, 상·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 그리고 재계 주요 인사 및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 또 조지워싱턴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주요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양 정상 간에 공고한 신뢰와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나가도록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심화와 발전 그리고 북핵 문제 및 대북정책 관련 공조, 한미 FTA,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및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지난 주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와 협의 방향 등에 대해 미 측과 사전 조율을 가진 바 있으며, 정부는 미 측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금번 방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금번 방미 기간 중에 상·하원 지도부 및 주요 기업인,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 의회·재계 및 학계 요로와의 협력관계를 일층 강화하는 한편, 조지워싱턴대학 연설에서는 21세기 우리의 국가발전 전략 및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설을 통해서 미국 내 인식과 지지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방미는 미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정상 방문으로써 양 정상 간의 우의와 유대를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달성을 위한 한미 간의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맹 미래 발전방향의 구체화와 다각적인 협력 증진을 통해서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미 조야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양국 간 우의와 협력의 저변을 더욱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2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아세안 열 나라의 정상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상들은 2차에 걸친 회의에서 한·ASEAN 관계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에너지,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 뒤에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한·ASEAN 정상회의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님의 신아시아외교 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인 ASEAN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교류 등 3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문서로 발표했습니다.

ASEAN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를 높이 평가하고 실질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별정상회의와 동 계기에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ASEAN FTA 투자협정 체결로 한·ASEAN FTA 체제가 완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한·ASEAN 정상들은 양측의 교역 규모를 2008년 902억 불 수준에서 2015년에는 약 1500억 불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행사로 개최된 CEO Summit에서는 ASEAN 6개국 정상과 기업인 700여 명이 참석해서 한·ASEAN 기업인들 간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에 개최된 금번 정상회의 시 정상들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ASEAN 국가들이 이와 같이 북핵 문제에 신속히 공동 대응한 것은 역내 북핵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상들과 외신 등이 철저한 회의 준비를 매우 높이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우리 한국의 이미지 고양과 제주도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던 것도 금번 회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금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께서는 10개국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국가별 양자 회담 성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우리의 우수한 원전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우리와의 녹색성장 협력에도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등과는 에너지자원 개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방산물자 수출 기반 조성 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가운데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SEAN 각국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위원장 박진 홍정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홍정욱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안 되는 현안이 발생했으니까요. 지금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채택은 시간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결의안의 강도가 약화될까 봐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 전망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질의 시작하기 전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로서는 문안이 거의 합의된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러시아가 마지막에 문안 조정을 다시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회람 중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먼저 P5, 그러니까 상임이사국 간에 협의를 하고, 거기에는 이번에 P5+2라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참가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되면 그 문안을 안보리 이사국 16개국에 회람을 합니다. 그것을 색깔이 블루라서 블루 카피(blue copy)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의가 되면 정식으로 안보이사회를 개최해서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빠르면 내일 새벽 아니면 모레 새벽—우리 시간입니다—에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회의결과를 봐야 그것이 수요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목요일날 끝날 것인지는 조금 상황에 유동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유엔안보리 결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사안이 결국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핵우산을 천명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어떠한 공약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안보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한미관계의 신뢰가 더욱 돈독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핵우산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용어로 나오고 있고 또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표명한다는 자체도 유의미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조금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 또 제가 먼저 방미해서 이러한 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 우려 관심을 미국 요로, 국무성뿐만 아니고 국방성 백악관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때 좀더 내실 있는 또 알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측에서도 저희의 그런 우려사항과 관심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도 일부 보도된 바와 같이 금번 6월 16일 한미 간의 정상회담 결과물로서 미래의 동맹관계에 대한 비전을 문서로서 발표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거기에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장 억지력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로는 익스텐디드 디터런스(extended deterrence)라는 것을 분명하게 거기에 문서로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양국 정상이 이러한 점을 좀 소상히 양국 국민들에게 밝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친 북한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말씀하신 확장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고 하는 의미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도발을 감행해 왔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미국은 철저한, 핵우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러한 공약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NATO와 같은 수준의 연합 억지력을 제공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 동맹국의 당사자가 무력침략을 받았을 때 상대방은 재래식 억지력뿐만 아니라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과 같은 그런 억지력을 행사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국내에서 관심을 갖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 2007년도에 우리 스스로 상당 부분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겠다고 합의를 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워딩을 보니까 '북한의 위협을 주의하면서 조정 소요를 반영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하지만 그 외의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국방부의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에 답

변을 드리자면 현재의 전시작전권 이전 준비 과정에 스트레티직 트랜지션 플랜(strategic transition pl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전환계획이 있는데 그 전략전환계획에 따르면 매년 상황을 평가해서 리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쎄스 앤 리뷰(assess and review)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개최되는 SCM 또 MCM, 그 앞에서 개정되는 MCM 회의—양국 군사 당국 간의 회의입니다—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상황을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상황 특히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북한의 핵실험은 바로 그것이 평가하고 반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그러한 표현을,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서 평가하고 반영한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제가 1분 더 쓰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그리고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내부 분위기는 특히 여기자 2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앨 고어 전 부통령이라든지 이름 있는 인사들의 특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국 여기자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아산 직원이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미 간에 정보 공유는 서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상회담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아산 직원 그리고 미국의 여기자 억류와 관련돼서 성명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정권이 전 세계에 유일한, 유례없는 정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보상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입장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한미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개성공단 억류 직원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미 측도 여기자 2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이것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라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 기자뿐만 아니고 한국의 억류 노동자가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 그리고 여러 번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개성공단의 유 모씨 억류 문제 등을 보면서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핵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들어 보니까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결의가 아직 채택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채택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다르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안보리 결의가 채택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최선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재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결의안이 곧 채택된다고 보고 예견되는 북한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우리 장관께서 보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늦어도 아마, 아까 말씀 올렸듯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까지는 확실히 채택이 될 것이고 빠르면 내일 아침, 새벽시간에라도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의안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선박이 위험 물자를 선적했다는 충분한 근거, 리즈너블(reasonable)한 그런 의심이 있을 경우 임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국(旗國), 소위 그 배의 플래

그(flag), 기국이 동의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동의를 안 할 경우에 가급적 인근 항구로 가도록 명령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의 결의안은 과거에 없었던 그런 임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밖에 무기 금수도 상당히, 북한이 수출하는 모든 무기는 수출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외화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소형 무기를 북한이 수입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금융 제재입니다.

북한이 WMD라든가 위험무기를 개발하는 데 관여돼 있는 모든 기관 또는 인물에 대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결의안은 북한의 위험무기 개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반응이 조금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채택이 되고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답답하게 될 텐데 그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타나는 반응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견되는 반응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인정할 수 없고 배격한다, 특히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의장 성명을 통해서 이미 결의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1718호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유엔안보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전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60만 대군의 우리 국군 가족 또 군에 보낸 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북결의안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지금 남북이 대치돼 있는 이 상황에서 대화의 통로는 그것이 대북특사가 되건 그것이 하다가 안 되면 현대아산을 통해서건 또는 어떤 라인을 통해서건 가능한 한 대화의 통로는 계속해서 열어둘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특히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다녀오시고 나면 그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은 확고하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국지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확장 억지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이 정부가 좀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과의 대화 통로는 항상 열어두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도 됐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은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렇게 계속 도발적인 그런 말이라든가 또 행동을 할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연합 억지력, 방위력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상황 악화를 방지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후계 문제 말이지요.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김정운으로 후계자가 거의 결정된 것 같이, 어제도 김정남인가 하는 그분 인터뷰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후계는 거의 결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후계 문제는 대부분 북한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언론에 상세히 보도가 됐고 또 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점을 두고 그것이 됐다든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서 볼 때는 하나의

과정,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잘 알아서 대처를 하시겠지만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볼 때도 저것은 어디까지나 진행성으로 보지 완치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또 후계 구도로 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체제로서는 지난 한 30년 동안을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수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특별히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해 주시겠지만 사실 미·중·일 3자 대화 부분에 우리가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앞에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특별히 대답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미·중·일 3자 대화 얘기는 그동안에 여러 번 학계를 통해서 논의되다가 최근에 정부 간에서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중·일 간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특히 테러와의 대처 문제라든가 지구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미·중·일이 논의를 한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는 어젠다에서 제외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일본과 수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했고 또 사전·사후에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데까지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저희들로서도 한·미·일 대화, 한·중·일 대화를 함으로써 다층적,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갖는 것이 지역의 평화, 안전 또 범세계적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그런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안보리 제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재에 대한 목소리는 크지만 결국 행동으로는 별로 나타날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박진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안보리 제재가 특히 1718호보다 더 위력적이라든지 또 그 외에 다른 것 생각하고 또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리 제재의 효과성, 유용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06년에 1718이 나왔을 때 그것이 중도에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북한이 다시 6자회담에 복귀해 가지고 비핵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진 상황에 있어서는 그 안보리 제재가 그렇게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안보리가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엔헌장 7장이라는 건 강제규정입니다. 7장을 원용해서 결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강제력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면 이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구성될 제재위원회는 일곱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P5 플러스 한국, 일본이 참여하게 됩니다.

제재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액션들이 나올 겁니다. 제재위원회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는 유엔안보리 자체가 다시 그것을 결의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제재 결의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북한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북한은 그런 제재가 힘겹다 싶으면 6자회담 나오면 되는 건가요, 이제? 다시 또 그 제재는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북한의 입장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영 위원 끝없이 6자회담이니 4자회담이니 옛날부터 94년부터 죽 보면 그런 회담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됐단 말이죠.

그러면 안보리 제재가 있더라도 또 3차, 4차

핵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상황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렇게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수용 안 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을 또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제재결의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재위원회가 아니고 제재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이 구성될 겁니다. 제재위원회는 안보리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걸 다루는 전문가 그룹을 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른 것은 그것은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영 위원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한 5, 6차례 했고 인도도 했고 하니까 북한도 3차, 4차 할 필요성은 있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면 그 가능성에 따라서 계속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가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지녀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뭐 이번 제재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제가 언론에서 읽은 적이 있고.

제재라는 게 결국 현금 들어가는 걸 막는 것도 강력한 수단이 되는데 금강산 문제는 항상, 전에도 한미 간에 약간 갈등이 있었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나요,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유엔 결의에서도요……

○진영 위원 충돌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금강산 문제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 특히 금융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정상적인 무역 거래 또 인도주의적인 것 또 북한의 개발협력을 위한 이런 것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영 위원 금강산은 어때요, 지금?

그 부분은 전에도 한미 간에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금강산 문제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왜냐하면 북한의 현금원을 차단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명백해질수록 거기에 대한 현금원의 제한이라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에 합의했던 전략적 동맹관계, 부시 대통령 때 합의했던, 그게 그 당시에 특별한 내용이 확정된 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같은 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작년 4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관계를 21세기의 전략 동맹관계로 강화, 발전시킨다는 것은 동맹의 범주를 전통적인 군사안보동맹에서부터 포괄적인 그런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뜻에서 이번에 우리가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는 동맹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 joint vision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한미 FTA 비준 문제는 어떤가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지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문제는 이미 지난 4월 2일에 런던 G20 정상회담 시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 FTA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같이 한미가 노력해 나간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서 지난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론 커크 USTR 신임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작업 스케줄을 대충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미 양국 통상장관 간의 협의가 진척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작권 전환을 자꾸 더 연기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양국 정상이 사실 합의한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만지작거린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점증하는……

○진영 위원 아니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합의한 거 아니에요, 이건? 외교적으로 다 합의한 사항인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합의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면에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듯이 많은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정부에 해오기 때문에 그런 체제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전환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 작업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홍정욱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북한은 실제로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또 실질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이 같은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도래한 한반도에서 제재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 스스로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위치와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국제 공조와 한미 공조가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 기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특사 파견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 정부당국 간에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예를 들어 누구를 보낼지 무엇을 협의할지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뭐 그렇게 구체적인 협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또 그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긴밀한 협의 중이시니까.

이 여 기자 문제 논의를 계기로 북미 간 양자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 스스로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북 간의 여러 가지 기타 현안에 대한 양자 문제에 대한 것하고 여기자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별도로 처리한다는 그런 기본방침에는 미국도 확고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미국이 여기자 문제와 북핵 제재 문제를 투 트랙으로 가겠다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어찌되었건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북미 간 양자 대화인데 이 상황에서 다른 이슈가 포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누가 가든 그 사람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그 기회에 여러 가지 미북 간의 양자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마는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여기자 문제 논의가 다양한 북핵 관련 문제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미국의 특사 파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특사라는 개념 자체도 그것이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가든 그것은 언론에서는 특사라고 그러겠지만 인도적인 하나의 미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미국 정부의 특사 파견이나 북미 직접 대화가 파견되거나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이라 그래도 우리 정부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건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인도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특사 파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라는 일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설이 아니고 Radio Free Asia에서 전혀 근거 없는 보도를 했고 우리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루머가 커진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말을 믿고, 만일 정부가 미국의 특사 파견 연기를 요청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 또 대화 노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모든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고, 만약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 물론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외 메시지나 정보 관리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단지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북 특사 파견이라는 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대한의, 물론 그 기자들의 신변 보장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지만 최대한의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한미 공조 차원에서 또 최근 일각에서는 김정운의 세습 문제, ICBM 핵실험 문제, 위조지폐 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미국이 대단히 불편해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국방부 측에서는 연합사 측에서 많이 불편해한다 이런 다양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의무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민감한 정보를 우리가 먼저 공개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저도 정보의 투명 공개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 정보 공유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그리고 북핵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자위적 핵보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관의 개인적 견해는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평화적 핵 사용에 대한 논의를 지금 본격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 우리가 NPT의 회원국으로서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권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핵 주권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핵 보유 논의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논의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화적 핵 사용 논의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평화적 핵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같은 시점에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고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홍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 위원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성공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수출 금지를 위해서는 PSI가 잘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 금지 문제라는 것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금융제재 문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되면 그것은 아주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테러지정국 재지정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은 공화당 미 국회위원 세 분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통해서 '북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부과해 제재 리스트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클린턴 국무장관이 '그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물론 법적인 어떤 충족을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 문제와 이 슈퍼노트 문제는 연결이 지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테러 제재하고 슈퍼노트 문제는 좀 별개 문제이고 그것은 별개 차원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차원에서 별개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제재라든가 이런 측면하고 더 연관이 있지 테러국가 재지정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좀 없다고 봅니다.

○김충환 위원 테러지원국 지정이 되면 금융제재가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테러국 지정은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라든가 국제기구·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는 연결이 되지만 슈퍼노트 위폐가 있기 때문에 테러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충환 위원 어쨌든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핵 확산 또 미사일 같은 이런 유엔의 금지 조치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자회담이 잘 안 될 경우에는 5자회담이라도 먼저 소집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들은 지금 5자라도 회합을 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5자회담이 시작되면 북한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로서는 당분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가 실효, 이행이 되고 그것이 효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북한이 돌아올 경우에 제재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돌아오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아마 제재는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미국의 대북 4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 번째, 네 번째에 '핵 확산 시에 보복을 한다' 또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과 관련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개념 또는 확장된 억지력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그렇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 확장된 억지력 속에는 핵 공격이 아닌 경우에도 핵을 포함한 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핵 공격이 아닌데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핵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미국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의 차원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충환 위원 한미 FTA에 대한 논의도 이번에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미 4월 2일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이번에 선언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난 60년 동안의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용성을 평가를 하고 한미 간의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또 신장된 국력 또 변화된 21세기의 안보 환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안보로부터 정치·경제·문화·사회 또 범세계적 이슈까지 좀 폭을, 외연을 넓혀서 한미 동맹관계를 소위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동맹관계로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원칙적인 그런 방침, 철학을 담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대체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을 우주발사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쏘아 올리려는 것은, ICBM은 구체적인 무기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우주발사체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그것은 하나의 첩보 차원에서 우리가 저거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이것은 ICBM이다, 우주발사체다 하는 것은 실체는 똑같은데 언론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어디를 강조하느냐가 문제인데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 우주발사체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발사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IC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똑같은 그런 원리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ICBM이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ICBM이라고 쓴 거고 또 중간실험 과정에서 볼 때에는 그냥 우주발사체라고 명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자신이 말하기를 ‘ICBM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북한의 의도가 명확히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더 국제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핵무기를 시험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하여튼 이번 한미 정당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태도, 또 이것을 통한 국민들의 불안을 좀 확실하게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지금 남경필 위원 하실 거예요?

○남경필 위원 예.

○委員長代理 黃震夏 남경필 위원 하십시오.

○남경필 위원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원래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보상황과 맞물려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상회담이 되었습니다. 장관께서 같이 대통령 수행하셔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더더욱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 무장론 등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홍정욱 위원님의 질의와 또 장관께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미래비전 선언에 핵우산을 포함한 핵 확산 억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확장억제 개념으로만 한반도의 핵 억제력이 충분히 담보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왕 국가안보를 위한 핵 억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계획, 컨셉트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

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런 동맹 비전에 그것이 포함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여러 가지 전략 개념을 국방당국 간 또 군사당국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컨셉트 플랜 정립의 필요성까지 다 담길 예정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한국의 확장된 억지력이, 핵무기를 포함해서 확장 억지력이 제공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하면 그것을 앞으로 이행하는 문제는 국방당국 및 군사당국 간에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를 들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개념계획 5027' 이런 형식으로 핵 억제, 핵 공격과 핵우산에 대한 새로운 개념 계획을 정립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은 한미 군사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또 하나는 관심이 한미 FTA 문제입니다. 이 한미 FTA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하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킬 그러한 예정이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이미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에 양국 간 통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그 전제하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한미 양국 간에 모색 중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FTA는 일방 당사국이 아니고 한미 양국에 공히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고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실무자 간에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선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국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느냐, 앞으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느냐가 한중 간에 가장 중요한 지금 외교 현안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떤 복안들, 어떤 앞으로의 전략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중 간의 정부 간에도 대화의 채널이 있지만 또 학계 간에 이 투(two) 트랙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 트랙 또 민간 트랙 또 1.5 트랙, 여러 트랙을 통해서 한반도 또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에도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행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한중 간의 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미·중 간의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그런 대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난주 주말을 기해서 우리 외통위원들 중에 정진석 위원님 또 구상찬 위원님, 김충환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외교 당국자들 또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 특히 김정일 정권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제 판단으로는 경제 제재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재들이 가장 위협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961년도 체결한 북·중 우호조약, 이것이 아마 북한 체제를 지켜 주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방편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우호조약과 관련, 계속해서 만일에 핵 실험을 강행하거나 도발을 할 경우에는 중국도 이러한 우호조약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나 메시지들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예,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옥임 위원님께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장관님께서는 스트러티직 트랜지션 플랜(strategic transition plan), 전략 전환 계획에 의한 상황 평가와 리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990년에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가 1993년도 제1차 북핵 위기로 완전히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그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엄중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2차 핵실험 했지요. 또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했지요.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연기를 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 의제에서 빠진 이유가 뭔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정상회담 의제에서 빠진 건 아닙니다. 한미 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진행형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지 중요한 어젠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핵우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번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된 억지력 해서 핵우산 제공을 정상회담 선언문에 넣는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일 정상 간에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일 간에요?

○윤상현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미일 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과 일본 간에 투 플러스 투, 국방·국무장관이 참여하는 안보회의에서 매년 핵우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원수 차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관님, 우리가 매년 한미 간의 국방부장관 사이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에 보면 핵우산이 매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망록으로 되어 있지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요번에 결국 핵우산을 미국이 한국에 제공을 하겠다, 이런 정상회담 선언에 넣는다는 것은 결국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 예정대로 가겠다는 한미 간의 어떤 묵시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거하고 전작권 문제하고는 연관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익스텐디드 디터런스(extended deterrence)를 명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한미 연합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넣는 것이지 이것이 전작권 문제에 대한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유엔 결의 1718호가 2006년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 실험 이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2007년도 2·13 북미 간 합의에 의해서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금 대북제재 결의안이 1718호보다 훨씬 강한 1874호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또 다시 북미 간에 어떤 합의가 있으면 또 유명무실화 될까 봐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개발 위협의 당사자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결국 북미 간의 어떤 모종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대북 제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북한이 이렇게 회담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해서 그런 유엔 제재의 결의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미국 정부, 오바마 행정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 5일날 오바마 대통령께서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걸 자기가 오바마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북한이 행동으로서 비핵화의 의

지를 보여 주지 않는 한은 그런 유엔안보리 결의의 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한국과 미국 간에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서 한미 간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미 간의 투 트랙 전략,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지금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행위, 예를 들어서 위폐, 위조화폐의 유통이라든가 마약 거래라든가 또 위조담배, 미국 제품의 위조라든가 불법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유엔의 제재를 통해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미국의 법 집행 차원에서 미국이 불법행위를 응징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좀더 철저하게 그런 이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하고 금융제재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미국이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결국은 금융제재인데 북한이 최근에 핵 실험을 하는 데 3억 달러,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하는 데 2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합치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최소 6억 달러, 7억 달러 가까이 썼다는 얘기인데 북한의 연간 무역액이 50억 달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제재야말로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간 돈이 5억 달러,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서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12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번에 강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개성공단하고 연계시켰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응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통일부장관이 여러 기회를 통해서 밝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에 화해·협력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계속 지속한다는 정부 방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서도 법적으로는 개성공단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융제재의 범주 밖에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최근 보도를 보면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이 되면 선제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이 되면 작전계획에 결국은 선제공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은 군사작전에 관한 문제인데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쏘는가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동해상이나 공해상이나 무슨 ICBM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향해서 쏜다는 것하고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서 쏜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나로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예,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촌스럽고 중복된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지난 5일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을 한미 동맹 문제로 간주해서 한미 정상 합의문에 확장 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하기로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니까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을 받았던 것과 같은 마찬가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험을 제거한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것은 정치적·군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외교부를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에 대한 방어 전략인데요. 확장 억지력이라는 개념으로 방어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촌스러운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앞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전작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에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관께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이 2차 실험을 했고 또 꼭 3차 실험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ICBM 발사도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한반도의 안보가 매우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과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어젠다로 들어가서 잘 정리되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조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한미 정상회담 때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양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의 목표가 말 그대로 완전한 비핵화인가 아니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의 핵 능력 보유, 핵 저지력 억제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비확산을 전제로 하는 무기화에 이르지 못하는 핵 능력 보유, 이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따라서 본 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확산만 방지하는 소위 불완전한 핵 포기를 타협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연에 방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번에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명확히 밝혔듯이 한미 간의 공통된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이것은 수없이 미국이 정책 설명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데 실례로 미국의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말씀이지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하는 발언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 간에 확실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핵 포기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를 양국 정상회담에서 꼭 확인 받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다음은 권영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미국이 신 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아직까지 대북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확립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돼 왔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확립된 입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미 큰 원칙은 한미 간에 인식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다음에 유엔 결의안, 아직까지는 초안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징적인 것이 PSI하고 별개로 이것은 공해상에서도 선적국 동의를 얻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세 위원 PSI하고는 별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PSI보다 더 강화된……

○권영세 위원 강하지요, PSI는 자국 영해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해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것이 애초에 우리 쪽에서 주장한 안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줄어든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이 당초에는 그것보다도 더 강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서로 타협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안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강한 내용이 뭐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검색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제법을 만드는 정도의 강한 표현을 선호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타협하는 과정에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강한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선적국 동의를 얻는다고 그러면 위험물질이건 아니건 북한에서 주로 이용하는 배의 선적국은 지금 대개 어디입니까? 북한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관행이 편의 선적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개 자기 나라 배를 자기 나라 국기를 안 쓰고 파나마나 무슨……

○권영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 배뿐만 아니고 그런 모든 나라의 선박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PSI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세 위원 물론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기국이 동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공해상에서 임검을 하고 만약에 기국이 반대할 경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인근 항구로 배를 가도록 지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하는 나라는 소위 쉽게 말하면 위반으로 옐로카드를 하나 받는 겁니다. 옐로카드가 쌓이면 처벌을 받는 게 되는 것이지요.

○권영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랑 대화가 되는 나라가 선적국이 될 경우에는 지금 동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인근 가까운 항구로 가서 그야말로 임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선적국인 그런 화물선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은 동의를 안 하겠지요. 위험물질이 선적이 되었다면 안 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인근 항구로 가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유엔 제재위원회에다가 리포트를 하게 되면 옐로카드를 하나 더 받게 되는 것이지요.

(황진하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세 위원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옐로카드를 하나 받게 되는데 리포트하고 옐로카드를 날리고 할 때는 이미 그 배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겠지요.

○권영세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유엔이라든지 우방국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이란을 목적으로 하는 배였다 그러면 이란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는 거네요. 옐로카드만 하나 받는 것 외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란이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옐로카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벙커링 서비스(Bunkering Service)라는 게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예를 들어서 연료라든가 서비스를 받는 것도 금지를 시켜 놨기 때문에 배라는 것이 무한정 공해상에서만 있을 수 없지요. 어디 가면 항구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을 보면 공해상에서의 연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서비스 받는 것을 영어로 벙커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것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제재 결의안입니다.

○권영세 위원 개성공단은 이번 결의의 제재 범주 바깥으로 빠지게 됐는데 그것은 잘 된 것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P5+2에서 상당한 이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금융이라든지 인도, 개발, 비핵화 촉진 목적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지원은 전부 금지한다라는 그 범주에 애초 포함이 돼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성공단 문제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는 얘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우리가 그 문제는 초안에 P5+2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처음부터 우리가 개진을 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처음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세 위원 제가 들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잘 빠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적 조치 문제도 처음에는 논의가 됐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유엔 7장의 41조가 소위 경제적 제재고 42조가 군사적인 저거인데 이번에는 41조를 지목해서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제재 분야는 삭제가 됐습니다.

○권영세 위원 42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애초에 아무런 기댈 근거가 없는 정도로 분명하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처음에 초안에는 강력한 제재안을 원했기 때문에 41조, 42조 모두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국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용어상 수사학적으로 바꾸는 것, 그런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42조는 다 제외가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41조만 원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사실은 이런 식의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게 중요한데 먼젓번 결의안 1718호 이행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만족스러웠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하고 19일에 제재 결의안이 6일 후에 통과가 되고 이행을 협의하다가 곧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서 비핵화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지난번에 4월 5일날 미사일 쏘고 나서 '이것 안 되겠다, 이행을 하자' 해 가지고 다시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을 통해서 각국의 이행을 촉구하게 된 것이고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다가 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취지의 결의안을 중국, 러시아가 다 찬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영세 위원 1718호에 대해서는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을 계속 이행한 것이지요.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수범국이, 그 규범을 받는 국가들이 뭐 북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협조 의무를 지는 나라들도 수범국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지요.

○권영세 위원 그런데 북한을 제외한 그런 다른 수범국들이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제재위원회에 다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건덕지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핵실험이 되는 바람에 그것은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지요.

더 강한 제재 결의안이 새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회원국이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요.

○권영세 위원 조금 더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외교통상부장관님 고생하십니다.

중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아주 잘 하고 오셔서 성과도 있고 또 정상회담 앞두고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됐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유엔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 말고 미국이 별도의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은 주로 방코델타아시아, BDA처럼 비슷한 금융제재 조치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관께서는 미국 스스로 또 단독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 어떤 것을 알고 계시며 또 어떤 것이 예측 가능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모든 제재 조치는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그것을 근거로 한 제재가 있고 또 양자적인 측면에서의 제재 조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근거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법집행 차원에서의 제재입니다. BDA도 결국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은 주로 위폐, 위조된 화폐하고 자금 세탁을 하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죽 수집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던 것을 이런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그런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집행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위폐를 유통시킨 흔적이 새로 확정됐다든가,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미국제 담배 같은 것을 과거와 같이 또 위조해 가지고 유통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머니런더링(money laundering) 돈세탁, 마약 밀매를 한 증거가 더 확실하다든가, 또 거기에 거래된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든가 하면 과거에는 그 증거만 채집하고 제재를 안 하던 것을 확실하게 제재를, 법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최근에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점을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黃震夏 委員 두 번째 질문은 미 국무부가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북한의 여러 가지……핵실험이라든가 여타 불법행위들을 자행을 하기 때문에, 또 6자회담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를 해 준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고 테러지원국 해제했던 이유가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해야 된다는 편지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앞으로 보냈고 국무장관은 그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제가 추가질문 드리는 것은 그렇게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부 조건에서 미비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법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6개월 이내에 북한이 테러행위를 했거나 테러리스트 지원한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지정을 해제한 이유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고 핵실험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제가 없어진 것이니까 다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되는 문제지 법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 행정부가 테러 지정을 다시 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법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반대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셨고 어떤 분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어젠다로는 딱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지금 북한에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쟁억제와 전쟁 사령부를 해체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해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북한에게 나쁜 시그널을 준다, 이것 하나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

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 핵실험을 해대고 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을 안보위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것을 갖다가 자꾸 합의해야 될 시기에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까지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별로 그 의미가 없었고 전쟁 억제의 효과가 없었던 조직이냐 이런 식으로 경시하는 태도처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검토돼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면에서 얼마나 알차게 준비가 되든지 그 여부를 떠나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보수단체뿐만이 아니라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 여기에는 지금 예비역 장성이라든지 재향군인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역대 경찰 총수들, 역대 외교부장관들, 역대 무슨 중요한 학자들 이런 분들이 같이 서명에 동참을 하고 지금 이 시기에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몰라라 하고 그렇게 그냥 계획된 대로 시행하는 자체는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에 줄 수 있는 오판 가능성 그리고 현 위기를 연합사 해체하는 작업까지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나쁜 인상들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다뤄지고 심사숙고가 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런 점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계신 외통부장관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무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장소가 외통위가 전시작전권 문제를 논의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전권 이양에 따른 CFC 해체 문제가 연합방위력을 저하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한미 양국 간에 중요한 이슈로 지금 논의가 진행형인 문제고 또 이 점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도 한미 연합 방위력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끝으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이러니까 핵주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핵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상회담이든지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국제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같이 국민들에게 잘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우산을 신뢰 안 하는 것처럼 돼 버리고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국제 신뢰를 확실하게 확보할 것은 확보하면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핵주권에 관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화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방금 테러지원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테러지원국을 카드로 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대화 통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요. 완전히 그냥 꼼짝달싹 못 하게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의 여부를, 우리 문제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미국에서는 감(感)이 못 할 것 같은, 제가 워싱턴에 가서 봐서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 황진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한미정

상회담을 할 때는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핵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 양국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오바마 신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께서 한번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 또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한미 양국 간에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고 동맹 관계의 강화 또 FTA 문제……

○정의화 위원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 다녀오신 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그때 한미 정상회담은 런던에서 약식으로……

○정의화 위원 미국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처음 가지요. 오바마 행정부 들어온 다음에는 처음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화 위원 내가 착각했네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핵주권론하고 핵우산 이런 등등의 얘기인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의 핵우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관계 또는 확약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저는 걱정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오늘 질문답변에서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더 이상 추가 답변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녀오고 난 뒤 결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핵 문제와 유엔안보리의 협의 동향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적인 문제 이런 중요한 국정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적법하게 소집이 돼서 열렸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산적한 국정현안과 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 위원들이 국회로 하루빨리 복귀해서 원만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고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이춘식 위원님, 또 권영세 위원님의 서면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원래 12일날 통일부로부터 남북문제 현안에 대해서 소집이 됐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내부 간담회 그리고 또 야당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 15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5일에는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결과 등 남북문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일에는 우리 야당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완전한 우리 상임위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정의화 위원님, 또 김충환 위원님, 그리고 황진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외교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최근에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을 만나고 돌아오셔서 오늘 소상한 브리핑을 해 주시고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협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구 상 찬	권 영 세	김 충 환	남 경 필
박 선 영	박 진	안 상 수	윤 상 현
이 범 관	이 춘 식	정 옥 임	정 의 화
진 영	홍 정 욱	황 진 하	

○청가 위원(1인)

정 몽 준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 희 권
전 문 위 원 허 영 호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 관 유 명 환
기 획 조 정 실 장 임 재 홍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최 종 문
북 미 국 장 장 호 진
국 제 기 구 국 장 신 동 익

【보고사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

선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동영	비교섭단체 (무소속)	2009. 6. 9

○의안 회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9. 5. 22 송영선·김태원·이성헌·김을동·안규백·이병석·이한성·박준선·백재현·이미경·김세연·이해봉·조경태 의원 발의)

5월 25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5. 27 정부 제출)

5월 28일 회부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3건 2009. 5. 28 정부 제출)

이상 3건 5월 29일 회부됨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2009. 5. 29 정부 제출)

6월 1일 회부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8 정부 제출)

6월 9일 회부됨